

따라 공사를 진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계기로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새롭게 단장한 임시정부 청사가 수많은 선열들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널리 알리고 우리 역사의 뿌리와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며 “평화 통일을 꼭 이뤄서 진정한 광복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타

■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방식 유지

보훈처는 2015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나흘 앞둔 5월 14일 이번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으로 부르는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보훈처는 “제3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예년과 같이 공식 식순인 기념공연에 포함해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전과 같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창으로 불러야 한다는 5·18 민주화운동 단체 등의 요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특히 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1991년 황석영, 리춘구(북한 작가)가 공동 집필해 제작한 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배경음악으로 사용됨으로 인해 노래 제목과 가사 내용인 ‘임과 새날’의 의미에 대해 논란이 야기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작사자 등의 행적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체계와 양립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제창 시 또 다른 논란 발생으로 국민 통합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훈처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5·18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야당도 비판에 가세해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됐다.

■ 재향군인회, 회장 비리 의혹으로 내분

보훈처가 관리·감독하는 국내 최대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향군)가 조남풍 회장의 비리 의혹으로 내분에 휘말렸다. 2015년 4월 당선된 조 회장이 선거 기간 유권자인 대의원들에게 대규모 금품을 뿌렸고 향군의 재정 위기를 초래한 인사의 측근을 요직에 기용했다는 의혹이 내부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6월 24일에는 향군 사상 처음으로 노조가 결성돼 조 회장 퇴진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조 회장의 각종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보훈처는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향군 노조가 제기한 의혹의 상당 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특별감사에서 조 회장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으로 향군에 막대한 재정위기를 초래한 최모 씨가 운영하는 기업의 사내이사인 조모 씨를 무리하게 경영본부장에 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2011년 향군 유커어사업단장을 하며 4개 상

장사 BW에 대해 지급 보증을 함으로써 향군에 79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인물이다.

조 씨는 경영본부장에 오르자마자 최모 씨의 소송에서 향군이 회수한 채권 금액을 214억원에서 450억원으로 부풀린 서류를 제출하려고 시도하는 등 최 씨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손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보훈처는 조 회장이 향군 인사 규정을 어기고 측근 25명을 향군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도 확인하고 이들의 임용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회장은 이들의 임용을 취소한 다음 대부분 재임용해 사실상 보훈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업계획에도 없던 ‘청년단’을 수천만원을 들여 조직하는 등 끊임없는 잡음을 일으켰다.

급기야 조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향군 직원들은 ‘향군 정상화 모임’을 결성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11월 말 조 회장을 5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현직 향군 회장의 구속은 향군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에 따라 향군 시·도 회장들은 12월 조 회장의 해임을 위한 대의원 임시총회 소집을 추진하는 등 향군 내분 사태는 연말까지 계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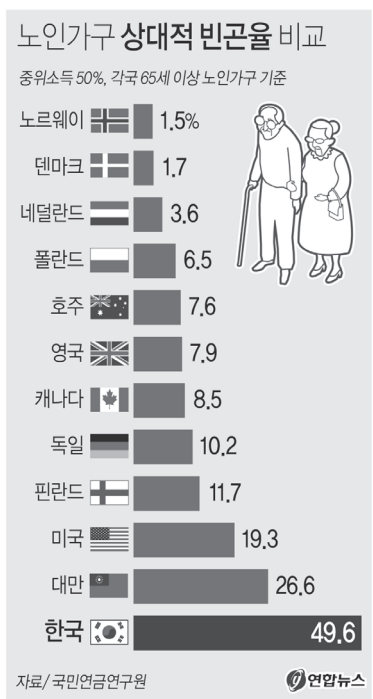
노인·여성·청소년

노인

■ 노인 10명 중 3명은 일한다…“외롭고, 아프고, 힘든 노년”

보건복지부의 ‘2014년 노인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28.9%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의 79.3%는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서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5년 5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봐도 한국 노인의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 비율)은 49.6%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소비 항목 중 주거 관련 비용



(40.5%) 부담을 가장 무겁게 느꼈으며 보건·의료비(23.1%), 식비(16.2%), 경조사비(15.2%) 순으로 부담을 느꼈다.

노인 10명 중 7명은 자녀와 함께 살지 않은 채 혼자 혹은 배우자와 둘이서만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 노인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시급했다. 자녀와 떨어져 살고 있는 노인부부가구(44.5%)와 독거가구(23.0%)를 합치면 67.5%로, 2004년 조사 때의 34.4%와 20.6%에 비해 각각 10.1%p와 2.4%p 늘었다.

한편, 조사 대상 노인 가운데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은 89.2%였으며 이들은 평균 2.6가지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노인의 10.9%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그 중 12.5%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었다. 자살을 생각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40.4%)이 가장 많이 꼽혔다.

■ 노인 5명 중 1명 '나홀로 삶'... '노-노 학대'도 문제

노년의 삶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다. 신체적으로도 기능이 떨어지고 경제활동, 사회생활 등은 청·장년층과 비교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독거노인은 총 137만8천 명으로, 전체 노인의 20.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 5명 중 1명이 홀로 살고 있다는 의미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2010~2035)에 따르면 독거노인 수는 2025년 현재의 1.6배인 224만8천 명으로 늘고, 2035년에는 현재의 2.5배인 343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점차 그 비중이 커지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는 독거노인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노인의 사회적 단절, 고독사, 자살 등을 모두 아우르는 과제다.

한편,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이 많아지면서 노인들 사이의 관계도 어려워졌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전국 2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접수한 신고사례 중 노인학대 건수는 3천532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노인 관련 시설에서 종사자가 노인을 학대하는 사례는 전년보다 줄어든 반면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이른바 '노(老)-노(老) 학대'는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학대 행위자(3천876명) 중 고령자 학대 행위자는 1천562명(40.3%)에 달한다.

■ 우여곡절 끝에 맞은 '기초연금 1년'... 축하하기엔 일러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 제도가 1년을 맞이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은 논란 끝에 결국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지급됐다. 2015년 4월부터는 전년 소비자물가변동률 1.3%를 반영해 기초연금 기준 금액이 기존보다 2천600원 오른 최대 월 20만2천600원으로 인상됐다.

도입 1년을 맞아 국민연금연구원이 65세 이상 노인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2.5%는 "생활에 도움이 된다"며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40.2%는 기초연금을 대체로 '식비'로 사용했으며 '주거비'와 '보건·의료비'에 쓴다는 답변은 각각 29.9%, 26.5%였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노년가구의 소득 수준이 나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박사에 따르면 2014년 노인가구의 3분기 및 4분기 이전소득은 각각 74만7천원, 75만7천원으로, 기초연금 시행 전인 2013년(66만6천원·65만6천원)보다 12.2%, 15.4% 증가했다. 노인의 빈곤율 역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해결'이라는 제 역할을 하려면 최저 빈곤층 보장, 물가 및 국민연금 연동 등을 일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2050년 노인 7명 중 1명은 치매...건강보험·지원 확대

노화가 진행되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수가 크게 늘면서 치매를 앓는 노인 또한 크게 증가한다는 데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2050년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15.1%로, 치매 노인은 271만 명까지 늘 것으로 예측된다. 치매 노인은 2010년 8.7%, 2013년 9.4%, 2014년 9.6% 등 점차 오르다 2020년부터 10%대를 유지하며 2050년에는 15.1%에 이른다. 노인 7명 중 1명 이상이 치매인 셈이다.

이에 정부는 2015년 12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치매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국가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7만~40만원을 부담해야 했던 신경인지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치매 노인이 집중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7년부터는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 2급 중증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연간 6일까지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의사결정능력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독거·중증 치매노인이 재산관리, 의료·요양 서비스 이용 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사회'...노력은 좋지만 효과는 물음표

우리 사회는 베이비붐 세대(1955~74년생)가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접어드는 2020년을 기준으로 초고령사회로 급격히 전환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2015년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해 사회·경제·문화적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했다.

우선 정부는 연구 용역을 실시해 2017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재 60~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65~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년과 연금 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일치시키고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을 통한 노인 소득 증대에 주력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부 정책 및 지원도 체계화된다. 건강마일리지, 건강 백세운동교실 등 노인의 건강유지를 위한 운동

을 장려하고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노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정부는 기본계획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첫째인 2016년에 교육 10조8천억원, 기초연금 10조3천억원, 반값 등록금 3조9천억원, 청년고용 2조원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은 부족해 보인다. 고령화 속에 숨은 '노인의 고령화'에 대한 고민 역시 부족한 게 사실이다.

여성·청소년

■ 개요

1995년 제정돼 여성정책의 근간이 된 '여성발전기본법'이 19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됐다. 법 개정으로 양성평등의 정의가 새롭게 규정되고, 성희롱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또 양성평등 실태조사와 양성평등위원회 신설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오랜 논의 끝에 62년 만에 간통법이 폐지됐다. 여성계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여성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조사를 한 이래 처음으로 여성 인구가 남성을 추월하며 '여초시대'가 도래했다. 또 국내 국회의원 33명이 참여하는 성노예·인신매매 피해자 근절을 위한 국제모임인 '성노예 피해자를 위한 국제의원연합'이 11월 발족했다.

아동·청소년 문제와 관련, 학업을 중단하거나 진학을 포기한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이 5월부터 시행됐다.

이밖에 한국과 일본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계속해서 입방아에 올랐다.

2014년 7월 여성가족부에 부임한 김희정 장관이 약 1년 6개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후임 장관에는 강은희 새누리당 전 의원이 취임했다.

■ 남녀 동반 성장 추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1995년 제정돼 '여성 정책의 헌법'이라는 평가를 받은 '여성발전기본법'이 20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어 2015년 7월부터 시행됐다.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여성 차별 해소에서 양성 평등 추구로 바뀐 것이다.

여성 차별 문제에 중점을 둔 '여성발전기본법'과 달리 '양성평등기본법'은 남성도 성별 분리나 성별 고정관념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포용한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은 우선 제3조에 '양성평등'의 개념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명시한다.

이 법은 또한 성희롱의 개념을 확대해 상대방이 성적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반대로 따

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성희롱 범주에 포함시켰다. 성적 요구 등에 따르는 조건으로 학점을 잘 주거나 불응 시 점수를 낮게 주는 행위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 밖에 여가부 장관이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년마다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법 시행에 맞춰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의 명칭은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양성평등위원회'로 바뀐다.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여성정책책임관 대신 양성평등정책책임관(기획조정실장급)을 지정해야 한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까지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5급)을 지정할 의무가 있다.

양성평등이라는 정책 목표 변화에 맞춰 '모성보호'에 집중됐던 시책은 '부성보호'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확대됐다. 법 개정 에 맞춰 매년 7월 1~7일로 지정된 '여성주간'은 '양성평등주간'으로 이름이 바뀐다.

■ 간통제 폐지

존폐를 놓고 논란을 거듭해 온 간통죄가 2015년 2월 폐지됐다. 1953년 간통죄 처벌규정이 제정된 지 62년 만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241조에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와 같은 현재의 결정은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성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당사자의 자유 의지에 맡겨야 할 개인의 성과 가정 문제까지 국가가 개입해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간통죄가 폐지되자 여성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위한 보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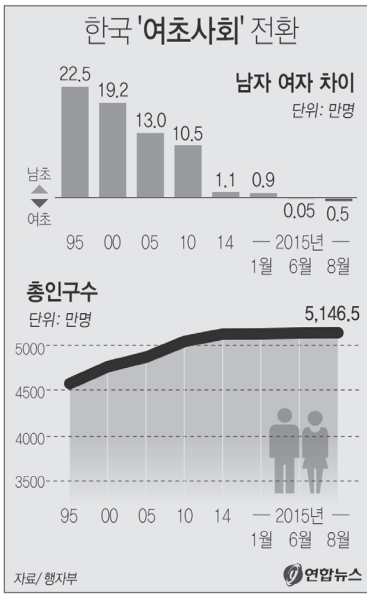
간통죄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해온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진보성향의 여성단체들은 간통죄 폐지 결정 직후 곧바로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민법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어 피해 배우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의 보수단체들은 간통죄 폐지로 성의 문란하나 가정보호의 약화 같은 역풍을 불러올 것이 우려된다고 여성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한국 '여초사회' 전환...주민등록 여자인구, 남자 첫 추월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남녀 비율이 역전돼 우리 사회가 '남초(男超)에서 '여초(女超)로 전환됐다.

2015년 6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여자 인구는 2천571만5천796명으로, 남자(2천571만5천304명)보다 492명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7월 말 여자 인구



는 2천572만5천 414명으로 늘어 남자보다 2천645 명이 많아졌다. 8 월에는 남녀 격차가 4천804명으로 더욱 벌어졌다.

여자가 남자보다 많아진 것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작성한 1960년대 후반 이래 처음이다. 통계청의 추계인구 기준으로 1960년 이후 작년 말까지 남녀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 수)는 한 번도 100명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일제의 강제동원이 극심했던 1944년 인구총조사 기준 성비가 99.38로 떨어진 때를 제외하곤 줄곧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남녀 비율 역전은 고령화가 심해지고 출생성비 불균형이 완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사회는 여자가 더 많은 '여초' 인구 구조를 갖게 된다.

또 1990년대에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가 최고 116.5대 100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점차 낮아져 최근에는 105.3대 100까지 낮아졌다. 1990년까지 계속된 출생성비 불균형으로 청·장년층에서는 남자가 많지만,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여자가 남자를 추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에 여성 독거노인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뜻이어서 노인 빈곤이 심화되고 사회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 '성노예 피해자를 위한 국제의원연합' 발족

한국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 5개국 국회의원이 분쟁 지역과 자연재해 지역에서의 성노예·인신매매 피해자 근절을 위한 국제 모임을 2015년 11월 구성했다. 이들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공식 사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임의 명칭은 '성노예 피해자를 위한 국제의원연합(IPCVSS·International Parliamentary Coalition for Victims of Sexual Slavery)'이다.

한국의 이자스민(새누리당) 의원, 마이클 혼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 연아 마틴 캐나다 연방의회 중신 상원의원, 멜리사 리 뉴질랜드 국회의원, 피오나 클레어 브루스 영국 하원의원 등 현직 의원 5명과 조이 스미스 전 캐나다 하원의원이 주축이 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첫 성명에서 "IPCVSS는 현대 판 성노예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협력할 것"이라며 "IPCVSS의 첫 행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이른바 '위안부'라는 성노예로 납치·동원한 데 대해 관련국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사실을 발굴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결론은 전시 여성의 인권 문제가 미래 세대에 어떻게 다뤄질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앞으로 소속 국가의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끌어내고, 내년에 첫 국제포럼을 열기로 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군 위안부 문제를 넘어 성노예·인신매매 등 여성인권 문제를 국제 사회에 적극 알릴 방침"이라며 "한국에서는 33명의 여야 의원이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시행·종합·체계적 지원 기대

학업을 중단하거나 진학을 포기한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이 2015년 5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률은 전국적으로 28만여 명에 이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법에 따라 정부는 연도별로 이들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지원계획 등의 심의는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가 맡는다.

정부는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 취업 지원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해야 한다. 또 학교장이나 단체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학생에게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와 연계할 의무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관련 법률 시행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업 중단 사전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5대 분야 18개 세부과제가 담긴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다.

우선 실태조사를 벌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이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상급학교 진학 희망자를 위해 검정고시 등 학업지원과 맞춤형 입시 상담을 제공하고 직업 교육과 취업 지원도 돕는다.

또 정기 건강검진과 동아리 활동,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도 지원한다.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 마련을 위해 한국마사회 렛츠런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유공간 10곳도 조성하기로 했다.

■ 김희정 장관 퇴임...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장관 취임

2014년 7월 여성가족부로 부임한 김희정 장관이 약 1년 6개월 재임하다 자리에서 내려왔다. 김 전 장관은 재임 기간 학교

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과 워킹맘·워킹대디 등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계층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실현했다.

그는 퇴임사에서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 밑에서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을 담당하는 여가부 장관으로 일한 건 영광이었다”며 “제가 마무리 짓고 가지 못하는 사업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부탁한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후임 장관에는 강은희 전 새누리당 의원이 취임했다.

■ 일본군 위안부 문제

2016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는 2016년부터 월 126만원의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5년 104만3천원에서 21% 증가한 금액이다. 1993년부터 지원된 생활안정지원금은 매년 3% 정도 늘려왔다.

간병비는 2015년보다 39.4% 늘어난 월평균 105만5천원이 지급된다. 2015년에는 매월 75만7천원이 지원됐다.

또 한국과 일본 정부가 12월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10억 엔(한화 97억원) 규모 지원 기금 등을 조건으로 위안부 협상을 타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이와 관련, 계속해서 입방아에 올랐다.

한·일간 위안부 협상 타결 후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만 담당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민간단체에서 하는 일”이라고 책임을 넘기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논란이 이어지자 여가부는 민간위원회 지원업무를 맡겼던 산하단체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사업 위탁 협의서’ 초안을 작성했다가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민간위원회에 대한 지원은 계속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등재와 관련한 정부 부처들이 일본 정부와의 마찰을 우려해 미리 선긋기에 나섰다.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 보호

■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확정

정부는 2015년 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향후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와 모든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자동차 결함에 대한 리콜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능장리콜’에 대한 벌금 신설,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직구(직접구매)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다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공개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절차를 마련해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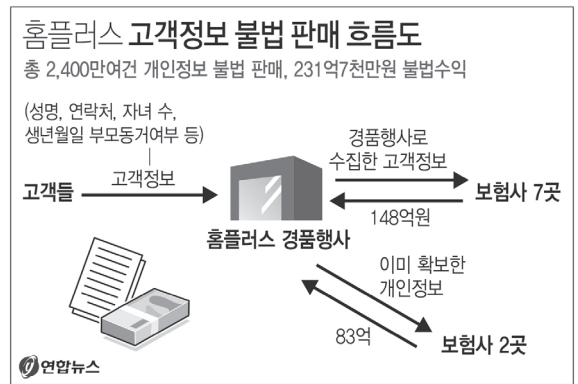
농축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중금속·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조사 결과를 적극 공개하며, 상습적인 원산지표시 위반업체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물티슈는 화장품으로 분류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대형상업시설과 공연장, 어린이집, 레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안전검사 불합격 시 이용금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열람과 삭제 절차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열람과 삭제가 수집보다 어렵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립해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역량 강화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계획을 밝혔다.

■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수집 논란



대형 유통사인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2천 400만여 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여러 보험사에 불법적으로 팔아넘겨 막대한 수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60)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 및 홈플러스 법인을 2015년 2월 불구속 기소했다.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2곳의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도 사장 등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2011년 말부터 2014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 건을 부당하게 입수한 뒤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1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경품행사는 외견상 고객 사은행사였지만 사실상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경품행사에는 응모권에 성명과 연락처만 쓰면 되지만 홈플러스는 생년월일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어내도록 했고 이를 기입하지 않은 고객은 경품추첨에서 배